다산포럼

정지창

노무현과 그의 시대를 보내며

비극의 주인공들이 자아내는 미적 정서는 흔히 숭고미와 비장미로 규정된다.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다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추락하는 주인공은 외경과 감동의 정서를 자극한다. 그리고 이러한 숭고미와 비장미는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사한 이순신과 관운장은 '성웅'과 '군신'으로 추앙되고,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다가 처형된 전봉준과 스파르타쿠스는 비운의 혁명가로 미화된다.

그렇지만 노무현의 죽음은 이러한 숭고하고 비장한 영웅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는 고전비극의 주인공처럼 왕이나 장군, 귀족도 아니고 반인 반신의 용사도 아니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나,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연민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인권 변호사로, 바보 정치인으로, 대중의 자발적 지지에 의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농민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절벽에서 몸을 던진 어수룩한 촌놈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되 그 추락의 낙차는 크지 않다. 왜냐하면, 노무현은 결코 신비로운 만년설로 빛나는 절대권력의 봉우리에 올라간 적이 없었고 그저 해발 100m의 야트막한 뒷산에 올랐다가 부엉이 바위에서 40m 아래 골짜기로 떨어졌을 뿐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휘두를 수도 없었으니까. 기득권 세력은 탄핵으로 그를 무력화시켰고 재벌의 앞잡이인 수구족벌언론은 집요하고 야비하게 그를 씹어댔다. 이제 권력은 청와대에서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대통령 노무현의 탄식은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진단이었다.

우리는 뒤늦게서야 그의 비극적인 추락이 4·19와 5·18, 6·10으로 얻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과에 안주했던 우리 모두의 탐욕과 나태와 위선의 결과임을 깨닫는다. 한때 그에게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던 서민 대중은 주식과 대운하, 뉴타운으로 떼돈을 벌어볼 욕심에, 이른바 386세대의 중산층은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어 출세시키기 위해, 등을 돌렸다. 민주시민과 노동자, 지식인들은 반대세력을 모질게 짓밟지 못하는 촌놈 노무현의 무력함과, 속내를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투박한 언행을 나무라며 현실정치를 외면하고 한탄만 하다가, 허황한 경제살리기 747공약을 내세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민주주의를 헌납하고 말았다.

노무현의 죽음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야만성을 증명한다. 온갖 풍파에도 끄떡없이 버텨온 세련되고 영악한 기득권세력은 재산도 학벌도 없는 시골 출신 대통령의 우직한 정의감을 비웃고 왕따시키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가 낙향한 고향 마을까지 따라와 처자식과 친구, 후배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끝장을 볼 때까지 괴롭혔다. 물고 뜯고 짓밟고 조롱했다.

약삭빠른 수구족벌신문과 방송은 권력에 빌붙어 알량한 잇속을 챙기려고 온갖 거짓말과 욕지거리를 끝없이 쏟아냈다. 심지어는 소박한 촌 집이 '아방궁'으로 왜곡되고, 봉하마을을 찾는 버스에 30만 원씩 돈을 준다는 헛소문까지 나돌았다. 줄을 풀어준 너그러운 주인한테 버릇없이 대들던 검찰과 경찰은 강퍅한 새 주인이 '물어라 쉭' 하고 줄을 당기자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전 주인이건 누구건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물어뜯었다.

토끼몰이를 당하는 고통이 오죽했으면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도 없다"고 비명을 질렀을까. 그들이 악에 바쳐 부르짖던 '잃어버린 10년'이란 구호는, 민주화의 대세에 밀려 빼앗겼던 기득권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찾아 다시는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과연, 그들은 '촛불'로 흔들리는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언론과 집회와 표현의 자유, 남북화해, 양극화 해소 등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을 불사함으로써 우리 시대를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내팽개친 '야만의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 기막힌 퇴행과 모욕에 맞서 힘없는 농민 노무현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 동안 추구해왔던 가치를 온몸을 내던져 지켜내는 투신뿐이었으리라.

1946년 병술(丙戌)생 개띠. 그가 기득권세력의 사냥개들에 쫓겨 헐떡거리며 살았던 개 같은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 탐욕으로 파헤쳐지고 남북분단과 지역주의로 갈가리 찢긴 산하를 장엄하고 처절한 낙조로 물들이며.

잘 가시오, 벗이여! 같이 태어나 같은 길을 걷다가 먼저 간 동갑내기 도반들의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본다. 화가 오윤, 시인 김남주, 음악가 문호근, 변호사 조영래, 그리고 바보 촌놈 대통령 노무현!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김형기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인 복지는 현재 장애인을 수혜자 또는 환자가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간주하는 소비자 중심주의, 장애인의 삶은 스스로 계획하고 서비스공급에도 직접 참여해야한다는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초기단계는 주로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 시설수용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탈시설화되고 지역사회보호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비스내용에 있어 보호차원의 배려에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재활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장애인들이 격리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이고 장애인을 변화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원천적으로 장애를 평생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장애는 장애인 본인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및 환경과의 역동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방해하는 환경요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자조·자립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권개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스스로 선택과 자기결정권을 갖게 하고 장애인의 주도적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장애를 무릅쓰고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당하게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현재 동구장애인협회회장과 동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 당사자가 해결하고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난해에는 광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동정어린 시선이 아닌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이 그들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자기 자신이 처한 장애의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현실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도전정신이야말로 장애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구장애인협회 회장〉

눈높이 맞춤형 귀농 지원 필요

농촌에 귀농자가 늘고 있다. 귀농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10여 년 전 IMF때 그랬던 것처럼 반짝 귀농, 화풀이식 귀농, 농촌을 우습게 알고 왔다가 버티지 못하고 돌아간 실패형 귀농이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에이, 농사나 짓지 뭐"라는 말은 함부로 할 말이 못된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며,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농업 자체가 중요하고 쉽지않은 산업의 한 분야라는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귀농자를 위해 각 지방에서는 귀농자 지원조례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들었다. 기왕지사 귀농자가 늘고 있다면 맞춤형 지원을 해서 이들을 연착륙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때 연착륙이란 실제 농사짓겠다고 온 사람이 아닌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의 실상을 소상히 알리고 농업 소득 수준과 여건, 목표치와 가능성 등 눈높이에 맞춘 귀농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귀농자에게 맞춤형 연착륙 지원을 잘만하면 진정한 농민을 더 늘리고 우리 농촌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숭열·목포시 옥암동

기고

김용하

진심어린 추모와 풀어야할 과제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미증유의 혼란과 슬픔을 겪고 있다. 퇴임 후 고향에 가서 친환경농업이나 하면서 자전거 타고,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려던 전직대통령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저간의 사정과 이 나라의 현실을 모두가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은 국민이 국가적인 비극에 당하여,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야 한다.

일찍이 중국시인 두보가 중국 사천성 동쪽 기주라는 깊은 산골에 낙향하여 가난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을 때 소계라는 젊은 청년이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다. 두보가 보기에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런 궁벽한 곳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군불견(君不見)이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 한다.

"길가의 말라붙은 작은 못도 옛날에는 용이 살았을지도 모르고, 밭두렁에 말라 넘어진 오동나무도 한 백 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에 누군가에 발견되면 값비싼 거문고의 재료로 쓰이게 될지 모른다.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내용의 시이다.

그래서 개관사시정(蓋棺事始定)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힌 뒤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으로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하기사 죽은 뒤라도 온전하지 않을 경우도 있었다. 살아 있을 때 저지른 행위가 후세에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해 재평가되어, 소위 부관참시를 당하는 역사적 사건까지도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로 종지부를 찍는 일이 대부분이다.

사실 사람이 한 치 앞을 어찌 알며, 행복과 불행의 교차를 어찌 알 것인가? 오늘의 잘못이 내일에는 정당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잘한다는 일이 다음에는 욕먹을 짓으로 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고, 남에게까지 엄청난 일로 다가와 서로를 패망케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성공하면 충신이고, 실패하면 죄인이 되고 만다는 말도 있다. 현실과 역사인식의 문제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부귀공명, 흥망성쇠는 그 부침이 한낱 아침이슬 같아서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세월의 흐름이나 정치 현실에 따라서 전혀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사회에는 보편적으로 지배되는 가치가 있게 마련이다. 즉 자유, 정의, 인권, 진실, 더 많은 사람의 복지라던지 국가사회의 존재이념들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들도 사람들의 기준과 추구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가지로 집약되지 못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항상 논란이 야기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측과 거부하는 측이 갈리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탐구와 조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대의 평가보다 더 많은 시간의 여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아가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가 평생 추구했던 가치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명하여, 발전시켜 가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냉철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전진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광주고등학교 교장·수필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1년 남은 지방선거에만 정신 쏟을 땐가

제5대 지방선거가 앞으로 꼭 1년 남았다. 내년 6월 2일이면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회 의원은 물론 교육감·교육위원을 새로 선출한다. 지방정가는 물론 중앙정치권마저 술렁인다.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방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줄세우기'의 못된 버릇이 도지고 있다고 한다. 전문성이나 능력은 뒷전인 채 지연·학연 등 단체장과 연줄이 있는 사람을 승진 우선 순위 자리나 노른자위 보직에 앉힌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를 내편, 네 편으로 갈라 공무원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니 지방행정인들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뿐만 아니다. 지역 내 직능단체나 지방 공기업, 산하 유관기관 인사에서도 능력이 아닌 선거 유불리가 잣대일 것이라는 의심도 끊임없이 나온다. 심지어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운 단체나 각종 모임까지 결성하고 있다. 선심성 기부행위도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선거보다 시급한 지역 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지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선거에만 정신을 쏟아서야 되겠는가. 특히 행정이 선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직을 이리저리 휘돌리고 왜곡하는 일은 더욱 안 된다.

선관위와 사정당국은 사전 선거운동이나 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나 정당을 불문하고 엄벌해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강력한 처벌만이 혼탁한 선거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불법을 일삼는 입지자는 지방선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드는 지역 유권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광주 이래선 '글로벌 도시' 어렵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광주에서 유일한 광주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 납입금만 2천만 원에 육박하고, 한국 학력으로 인정도 되지 않아 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광주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거주 외국인 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광주지역 초·중·고에 재학중인 외국인 자녀는 653명에 이른다. 하지만 광주의 유치원·초·중·고 529개교 중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다.

이 지역의 유일한 광주외국인학교의 경우 높은 납입금 때문에 전체 95명 중 외국인 재학생은 25명에 불과하다. 이름만 외국인 학교이지 실제로는 한국 학생들의 영어학교나 다름없는 것이다. 게다가 납입금의 경우 유치원이 연간 1천318만원, 초등학교 1천454만원, 중학교 1천556만원, 고등학교는 1천638만원에 달해 많은 외국인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이다.

교육 인프라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에서 규제와 세금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교육 문제이다. 교육환경이 투자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대도시들이 외국인 2세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외국인 1만 명 시대'가 말해주듯 광주 역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때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환경 확충은 우선 과제다. 교육시설이 빈약하면 제 아무리 비엔날레, U대회를 개최한들 '글로벌 도시 광주'는 말짱 헛구호일 뿐이다.

無等鼓

천안문(天安門)

1949년 10월 1일. 지루한 항일전쟁에 이어 수년간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마침내 승리한 마오쩌둥(毛澤東)은 감격에 넘치는 목소리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톈안먼(天安門)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선포에서 꼭 30년을 거슬러 간 1919년 5월 4일에도 톈안먼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나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선 청년학생들이 민족독립을 부르짖었던 '5·4운동'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건국 선언 후 40년이 흐른 지난 1989년 6월 4일 톈안먼에서는 새로운 절규가 흘러나왔다. 중국의 민주화운동을 갈망하는 목소리였다. 당시 베이징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수만 명의 시위대는 오로지 조국의 민주화에 목숨을 내걸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젊은이가 온몸으로 탱크를 가로막으며 저항하던 처절한 장면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그러나 당시 경제건설을 지상목표로 세웠던 덩샤오핑(鄧小平)을 위시한 중국 지도부의 결정은 냉혹했다. 며칠 사이 수만의 시위군중은 자취를 감췄고 정치(사회주의)와 경제(자본주의 방식)를 철저하게 분리한 '중국식 특색사회주의' 구호 아래 민주화 요구는 이내 가라앉았다.

톈안먼의 자리에 최초로 지어진 성문은 쯔진청(紫禁城)을 건설한 명의 영락제 시대 1417년에 건설된 청톈먼(承天門)이다. 화재로 소실되기도 했던 이 문은 청나라 순치제 1651년에 재건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만주어 명칭으로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린다'는 뜻의 톈안먼은 중국의 '상징'이다. 명, 청 때는 큰 법률이나 명령이 최초로 발표된 장소이기도 하다. 출전하거나 개선하는 군대는 이곳에서 황제를 알현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톈안먼에서 중국 민주주의의 개화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은 언제쯤일까?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편집부 2200-672 / 정치부 2200-634 / 경제부 2200-641 /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 문화생활부 2200-661 / 여론매체부 2200-679 / 체육팀 2200-663 / 사진부 2200-691 / 조사부 2200-571 /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 디자인 2200-536 /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